

수험생은 실험용 동물이 결코 아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나는 요즈음 대학입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대학입시를 앞둔 자식들이 없다는 것도 내가 그리 큰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 중 하나일지 모른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대학입시제도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자꾸 표류하는 것 같아 아예 관심을 갖지 말자고 결심한 데 있다. 역주행만 일삼고 있는 대학입시제도를 보면 짜증과 함께 좌절감이 솟구치기 때문에 정신건강을 위해 관심을 끊고 살기로 결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대학입시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무지무지하게 복잡할뿐더러, 수험생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매우 비교육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라는 사실은 정확히 알고 있다. 나는 대학입시가 왜 이렇게 복잡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성적순으로 한 줄로 세우는 것이 문제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복잡한 제도를 만들어 수험생과 학부모의 열을 빼놓아야만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어떤 제도든 간에 단순함 그 자체가 미덕인 경우가 많다. 불필요하게 복잡한 제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제도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에만도 많은 비용을 치르게 만든다. 이런 낭비를 막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의 정부는 모든 제도를 단순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크게 보면 우리나라도 여기서 예외가 되지 않는데, 유독 대학입시제도만은 날이 갈수록 더욱 복잡해지는 역주행을 하고 있다. 불과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기만 해도 그 짧은 기간 동안 대학입시제도가 얼마나 더 복잡해졌는지를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복잡한 대학입시제도는 당연히 수험생의 부담을 무겁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 부담이라는 것이 생산적인 성격의 것이라면 그나마 다행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수험생에게 가해지는 부담은 매우 비생산적, 비교육적인 것이기에 더욱 비극적이다. 경시대회니 뭐니 하는 스펙 쌓기는 물론, 논술고사나 면접 준비를 위해 쏟아 붓는 막대한 시간이 모두 비생산적일 뿐이다. 지식의 축적을 위해서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창의성이나 인성 배양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늘 강조하는 바지만, 개혁을 한답시고 제도를 이리저리 뜯어 고친다고 능사가 아니다. 그 동안 대학입시제도에 술한 변화가 있었지만, 진정으로 개선된 점은 별로 없다. 내가 보기에 1960년대의 대학입시제도에 비해 지금의 제도가 더 낫다고 말할 근거를 찾기는 힘들 것 같다. 학생들의 부담이 더 가벼워진 것도 아니고, 더 나은 인재를 뽑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된 바도 전혀 없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 많은 비용을 들여가며 대학입시제도를 바꿔왔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이 정부가 출범할 시점에서 모든 것을 뜯어고치려는 과욕을 부리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이것저것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자기네들 입맛대로 뜯어고치려 들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철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설익은 아이디어로 이것저것 손대려 하는 태도가 나에게서는 아주 위험한 것으로 보였다. 나는 지금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당시의 내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해 주리라고 믿는다. 교육제도가 그 대표적 예지만, 이리저리 손대 보았자 나아진 점이 별로 없었다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있을 테니 말이다.

어제 발표한 고교내신의 절대평가 회귀 방침은 무분별한 역주행의 또 다른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더군다나 이것은 2004년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 폐기했던 제도로 회귀하려 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문제가 한층 더 심각하다.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다 하지만, 국민이 보기에는 정부가 일관성 없이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 일관성이 없는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폐기한 제도를 다시 살리는 것은 극도의 신중을 요하는 문제다.

현행의 상대평가제도에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점은 구태여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가 지금 돌아가려 하는 절대평가제도에도 비슷하게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역시 분명한 사실이다. 애당초 문제점이 많다고 느꼈기 때문에 상대평가제도로 바꾼 것이 틀림없을 테니까 말이다. 그렇다면 그 동안 주변의 상황이 크게 바뀌어 이제는 절대평가제도가 상대적으로 더 바람직한 제도가 되리라도 했다는 말인가? 만약 정부가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 상황의 변화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지 궁금하기만 하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거의 비슷하게 문제점이 많은 두 제도 중 한쪽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따라서 두 제도 중 하나를 새로 선택하는 경우라면 절대평가제도를 선택했다고 해서 심각한 이의를 제기할 생각이 없다. 어느 쪽이 상대적으로 더 나은지의 논란은 여전히 남겠지만, 한쪽을 선택한 것이 큰 시빗거리가 되어야 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상대평가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슷하게 문제점이 많은 절대평가제도로 바꾼다는 것은 경우가 다르다. 제도의 변화는 불가피하게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아주 명백한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는 한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별 다른 이유 없이 상대평가제도를 절대평가제도로 바꾼다는 것은 별 다른 이유 없이 다시 상대평가제도로 돌아갈 수도 있음을 뜻한다. 정부의 무책임한 실험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애꿎은 수험생만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다.

어제 교과부 관계자가 절대평가제도로 회귀하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내건 명분은 창의성과 인성을 평가하는 대입전형 방식을 정착시킨다는 것이었다. 내 부족한 머리로는 절대평가제도가 창의성과 인성 배양에 왜 도움이 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상대평가제도하에서는 학생들의 창의성과 인성 배양이 어려운데 절대평가제도하에서는 그것이 쉬워지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나는 그런 선문답 같은 추상적인 말로는 절대로 국민을 설득시킬 수 없다고 믿는다. 그렇지 않아도 불신의 대상인 현 정부가 이런 말도 되지 않는 근거로 또 다시 불신을 사려고 나서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절대평가제도로의 회귀를 정당화시킬 수 있으려면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명백하게 입증해야 한다. 하나는 2004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크게 달라져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그때는 상대평가제도가 상대적으로 더 바람직했는데 이제는 절대평가제도가 더 바람직하게 되었음을 설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연 절대평가제도로의 회귀를 정당화시켜줄 수 있는 지난 7년 동안의 상황 변화가 무엇이였을까? 나는 그 답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

또 하나는 절대평가제도가 상대평가제도에 비해 의문의 여지가 없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을 입증해 2004년에 내린 판단이 잘못 되었다는 점을 밝히는 일이다. 그러나 어제의 정부 발표에는 이 점에 대한 그 어떤 설득력 있는 근거도 제시되지 않았다. 상대평가제도가 빛는 부작용에 대한 언급만 있었지 공정한 기준에서 두 제도를 비교, 평가하려는 노력은 그 흔적조차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런 무성의한 태도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은 바보스러운 일이다.

모든 중요한 현안문제는 공론의 장에서 충분한 토의와 검토를 거친 후에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정도(正道)다. 우리 사회의 실정에서 고교내신의 산정방법은 무시할 수 없는 중요성을 가진 문제다.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 우리들 사이에서 지난 몇 달 동안 얼마만큼 토론이 이루어졌는지 묻고 싶다. 공론화의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밀실에서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주고받은 후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해 버린 것이 아닌가? 이 정부의 트레이드마크처럼 되어버린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의 또 다른 예를 보는 것 같아 입맛이 몹시 썩쓸하다.

일부에서는 절대평가제도로 돌아가려는 결정이 이 정부 출범 초 야심적으로 내건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의 핵심인 자사고 100개교 설립과 관련을 갖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벌써 3년째 미달사태를 빚고 있는 자사고를 구체화하려면 이들에 대한 특혜조치가 필요하고, 그런 맥락에서 절대평가제도로 회귀하기로 결정했다고 의심한다는 말이다. 교육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이와 같은 제도의 변화가 특목고, 자사고 열풍을 불러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을 보면 그런 의심에 아무런 근거도 없다고 목살하기는 힘들다고 느낀다.

나는 정부가 그와 같은 근시안적 관점에서 절대평가제도로 돌아가기를 결정한 것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왜 그런 결정을 내렸어야만 하는지를 한 점 의심의 여지없이 설명하지 못하는 한 그런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내 판단으로 아직까지 정부는 우리를 전혀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나를 위시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결정을 내린 정부의 진의가 과연 무엇인지 납득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이 시점에서 정부가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나중에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교과부 장관이 바뀌더라도 다시 상대평가제도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느냐는 것이다. 만약 이런 확신이 없다면 지금 이 단계에서 절대평가제도로 돌아가려는 계획을 포기하는 것이 좋다.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는 대로 이랬다저랬다 하는 과정에서 혼란만 더 크게 만들 뿐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기성세대의 무책임한 실험 탓에 어린 수험생들의 가슴에 수많은 상처를 남겼다. 수험생은 실험용 동물이 결코 아니다. 이젠 것처럼 무책임한 실험에 중지부를 찍고 어린 가슴을 어루만져 주어야 한다. 정권이 몇 번 바뀌어도 끄떡없이 유지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의 변화가 아니라면 아예 거론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게 좋다. 몇 십 년에 걸친 시행착오를 통해서도 배우는 게 아무 것도 없는 정부라면 어떻게 국민의 신임을 받을 수 있을까.